

#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제한

민주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토록 제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8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참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



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서난이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 전북 균형발전 특위 ‘새출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 부위원장에 정종복 의원을 선출했다.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2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총 11명의 의원으로 정종복(전주3), 최형열(전주5), 한정수(익산4), 국주영은(전주12),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서난이(전주9), 김성수(고창1), 이명연(전주10), 장연국(비례), 윤수봉(완주1)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8년 6월 11일까지 1년이다.

전북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실천 주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특위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교통체계 대응, 특구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교육위 현장의정활동

### 전북교육청 학생수련원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제4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인 학생수련원을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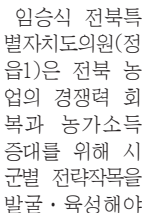
학생수련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복합모험활동장 내에서 질라인 체련 활동을 하던 고교 1학년 학생 1명이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학생은 닥터헬기로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척추골절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질라인 시설을 둘러보고, 사고 발생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 시 현장의 긴급 구조조치는 적절했는지, 평소 수련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질라인 외에도 수련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또 다른 안전 취약점은 없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이만호 기자

## “시군별 전략작목 발굴·육성해야”

임승식 도의원, 농업 경쟁력 회복·농가소득 증대 위해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읍1)은 전북 농업의 경쟁력 회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군별 전략작목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북은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작목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농가 소득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추진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도는 수박·천마·파프리카 등 10개 작목에 195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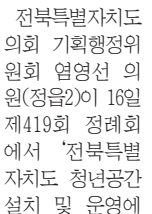
임 의원은 시군 협의체 중심의 작목 선정, 연구·육성 공동 추진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유통·가공·수출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시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실질적인 경쟁력 있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청년들의 자립적 활동 지원·권익 증진

염영선 도의원, 전북자치도 청년공간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염영선 도의원



염영선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6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역량 개발 지원, 고용 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공간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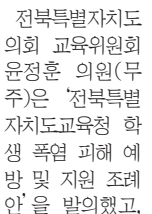
염영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활동 지원과 권익 증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공간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공간의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져 청년 지원 정책이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학생 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윤정훈 도의원, 학생 폭염 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윤정훈 도의원



윤정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정훈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국민주권정부 성공·당원주권 2.0 완성 총력”

민주 김운덕 의원, 사무총장에 재임명돼… 당 최초 5연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체제의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3선의 김운덕 의원(전주갑)을 사무총장에 재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운덕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직부 총장으로 총선 승리를 설계한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발탁을 받아 사무총장직에 임명됐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 박찬대 권한대행 체제까지 맡아온 김운덕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당 안팎에선 ‘검증된 실패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재정·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노하우가 한번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고 전했다.

김운덕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전



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등 당원의 참여구조를 제도화하며 당 안팎의 신뢰를

끌어올렸다.

특히 12·3 내란국면에서 비상계엄 음모 대응과 조기 대선 체제 전환 과정에서도 이재명 지도부를 실무로 견인했고, 대선 캠페에선 총무본부장·총괄수석본부장·대테러 TF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 관리와 위기대응을 총괄하며 당내 조직 장악력과 실무 감각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자들과 만난 김운덕 사무총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구 전주

시민, 전북특별자치도민께서 다섯 번이나 연속해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재임명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신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추구해 온 ‘당원 주권’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라는 명령이자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운덕 사무총장은 “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재정을 책임지는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권희성 기자



“차기 국정운영 방향 수립에 선제 대응”

조성연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이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방향 수립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있다.

## 군산시의회 “CNG 버스 충전 보조금 지급 재개해야”

한경봉 의원 등 발의 건의안 채택… 예산 지원 방안 마련·시민 교통권 보호 위한 대책 수립 등

군산시의회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정부에 충전 보조금 지급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0회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 등 의원 일동이 발의한 ‘CNG 버스 충전 보조금 지급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CNG 버스를 적극 보급해 왔고, 2005년부터는 노후 경유버스 신규 등록을 금지해 사실상 CNG 전환을 유도해왔다”며 “군산시는 2003년부터 CNG 버스를 도입해 현재 시내버스 52대를 포함한 총 92대의 차량이 CNG를 연료로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상황은 달라졌다. 전기·수소버스를 ‘무공해차’로 지정하고 지원을 집중하면서,



한경봉 의원

CNG 차량은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실제로 2024년부터는 CNG 버스에 대한 차량 구매 및 연료비 보

조금이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연료비 부담 증가다. CNG 단가는 2025년 1월 기준 m당 2,067원으로, 1,213원이던 과거에 비해 무려 70% 이상 폭등했다.

시의회는 “운영비가 급증하면서 버스업체와 청소차량 운행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산도시가스의 가격 인상으로 체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체납이 발생하면 공급 중단으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위기 상황”

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CNG 버스를 모두 퇴출하고 전기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CNG 차량을 도입했던 버스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됐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CNG 버스가 완전히 교체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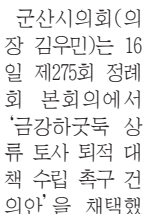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는 CNG 버스의 대·폐차 완료 시점까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시민들의 교통권 보호를 위해 CNG 차량 운행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정부가 나서야”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송미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수출입 항만이자 지역 산업과 국가경제를 견인할 핵심 시설이지만,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심각한 토사 퇴적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쌓이는 300만m의 토사 중 70만m만 준설되고 있어 항만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토사 문제로 군산항이 물동량 확대와 신항만 개발 등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며, “정부가 수문 개방, 추가 갑문 설치, 상류 퇴적도 준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군산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거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진안군의회 정례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6일과 1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